

대학, 생존을 넘어 세계로

 김현영 | 강원대학교 총장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81명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2024년 43만여명, 2040년에는 28만명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 지역대학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인구 감소의 문제는 비단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강원도의 경우 18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대학의 생존을 넘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대학과 경쟁하기 위해 해외 인적자원을 전략적으로 받아들이고 육성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입학자원의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지역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먼저, 유학생의 구성과 국적이 다양한 만큼, 이들의 역량과 자질, 유학 동기에 따라 맞춤형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내국인 학생들과의 문화적 교류를 확대해,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강원대학교가 2020년 설립한 ‘글로벌한국학과’는 강원대학교 학부생과 외국인 유학생(재학생 및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각 분야의 현상에 대한 진단과 미래 전망에 대해 영어와 한국어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만 전 세계 266개 해외 자매대학 재학생 87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신설될 예정인 ‘글로벌문화융합학과’ 대학원 과정은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 강국이 된 대한민국의 케이 컬처(K-culture)를 기반으로 하여, 예술학·예술경영학 등 다방면의 문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유학생 전용 교육과정을 중국어와 영어, 한국어로 진행하며, 2023학년도부터 학부과정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도시 춘천을 중심으로 다양한 강원권의 문화콘텐츠와 연계해 한국의 문화를 이해를 돕고, 케이 컬처의 수요가 많은 중국, 유럽, 중남미 지역으로 외국인 유치 전략을 다각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하나 중요한 과제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기업과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다. 영동지역의 경우, 규제자유특구, 국가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청년인구 감소로 인한 제조업 인력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은 주당 20~35시간을 근무할 수 있으며, 방학기간이나 주말에는 시간 제한 없이 노동이 가능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강원대학교는 지역과 공동 발전을 위한 ‘일·학습 병행형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 내 산업단지와 연계해 입국 전부터 일자리 매칭을 통한 취업연계형 유학생을 유치하고, AI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데이터 라벨링(Data Labeling)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해외 고급인력의 지역 노동시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학생들에게는 재학기간 동안 미래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졸업 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대학이 직접 지역 산업과 연계된 합법적 틀 안에서 근로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일부 유학생들이 학비를 벌기 위해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방지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적 차원의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미국은 2021년에만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91만명의 유학생을 받아들여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학위취득 후 이들을 미국 노동시장에 유입시켜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삼고 있다. 일본도 2008년부터 우수한 해외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산업과 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 인재 유치를 적극 실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국내 노동시장 편입 정도가 매우 낮으며,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기 위한 과정이 요구된다.

대학의 글로벌 역량 강화는 대학의 생존을 넘어,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위한 전략이다. 대학의 혁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대학과 지역, 국가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출처:강원도민일보 기고_김현영 강원대학교 총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고온 우주 발사체, 극저온 수소 등 극한환경에서 견디는 첨단소재를 확보한다

- 총 3,096억원 규모 “극한환경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3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예타 신청('21.12.) → 예타 대상 선정('22.1.) → 본 예타 통과('22.8.19)
- 극한소재란 초고온, 극저온, 초고압, 산화·부식 등과 같은 극한환경에서 활용되는 국가전략 소재로, 우주항공 위성발사체, 액체수소 저장, 초고온 가스터빈 등에 활용되는 소재를 일컫는다.

 - 우주항공 위성발사체(2,000°C ↑), 액체수소 저장(-253°C ↓)
- 극한소재는 우주항공, 수소, 가스터빈 발전 등 미래산업 환경이 극한화됨에 따라 더욱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을 뿐 실증연구*를 통해 실제 제품화·사업화까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 극한소재의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 (실증연구)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의 현장 적용성 및 기능 구현성을 검증, 개선하는 과정으로, 시제품 단계의 스케일업 연구를 대상으로 함 → (예: 발사체 신소재 실증) 초고온(2000°C 이상) 환경(+고압·산화)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소재의 기계적 물성(피로수명 등)과 열차폐 영향·특성 등을 평가 및 실증연구
- 극한소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해외의 시험평가 기관에 의존했고 그나마도 기술안보품목의 경우는 해외에 의뢰하기도 쉽지 않았다.

 - A사의 경우 우주항공용 소재에 대한 연 250억원 규모의 시험평가수요가 있으나 국내 시험평가 기관이 없어 기민한 대응이 어려우며, 방산소재의 경우는 해외 위탁 원천 불가
-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극한소재의 시험평가와 시범생산 등 기업,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증연구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선도국과의 극한소재 기술격차 극복 및 선도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 이번 사업에는 '23년부터 '28년까지 총 3,09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한국재료연구원 인근(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에 초고온, 극저온, 특정극한 관련 극한소재 실증을 위한 3개 시설 및 44종의 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확보가 시급한 28개 극한소재 실증연구과제를 지원하여, 선도적인 극한소재 확보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 이번 사업은 이를 통해 2028년까지 “항공엔진부품 3D 프린팅 기반 금속분말소재(예시)”, “액체수소저장용기용 단열소재(예시)” 등 세계적 수준의 극한소재 10개 이상을 확보하고, 실증을 완료한 극한소재 시제품을 60개 이상 도출하는 등, 기술경쟁력 향상 및 기술주권 확보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이번 사업 추진이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수소, 에너지 등 미래산업에 쓰이는 고부가가치 소재 확보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며,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극한소재를 비롯, 우주항공,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활용되는 선도적인 소재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미래소재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확충 및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개혁 논의

-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 발족 및 회의 개최(8.23) -

-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단장 :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발족하고, 8월 23일(화) 오전 10시에 첫 회의(kick-off, 주재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추진단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건강보험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할 예정이다.
- 건강보험은 1977년 제도 시행 이후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달성하는 등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왔으며,

 - 그 결과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적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기대수명**, 암 사망률*** 등 대표적인 지표에서 높은 수준의 건강 성과를 달성하였다.
 - 1인당 경상의료비('19년 기준) : (우리나라) \$3,406 vs (OECD) \$4,087
 - 기대수명('19년 기준) : (우리나라) 83.3세 vs (OECD) 81세
 -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21년 기준) : (우리나라) 151.8명 vs (OECD) 186.3명
- 그러나 최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일부 항목에서는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 (예) 뇌·뇌혈관 MRI 재정지출 : 연 2,053억 원 목표 대비 '21년 2,529억 원(집행률 123.2%)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출 : 연 499억 원 목표 대비 '21년 685억 원(집행률 137.2%)

○ 이번 추진단 운영을 통해 기존에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이용이 있는지 등을 재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과다의료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없는지 살펴보고,

- 연 500일 이상 외래 의료이용자 : ('17년) 469명 → ('21년) 528명(+12.6%)
- ('20년) 백내장수술 건의 14.4%(관련 건보지출 980억 원)가 실손보험으로 인해 발생 추정(「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보험연구원)

○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출구조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추진단은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복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하여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추진단은 국민분들이 현재 받고 계시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하고 하고 있다”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하는 실행방안 논의

- 8. 23. 사회적 관계 촉진 토론회 개최, 심리학계·문화예술계 전문가 참여 -

□ 심리학계와 문화예술계 현장 전문가들이 코로나19로 증가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8월 23일 (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 문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정서적 취약성이 증가하고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 4월부터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감 사례관리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시범사업을 토대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예술, 체육, 인문 프로그램 등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실행방안을 모색한다.

□ ▲ 총신대학교 조현섭 교수는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사업’을 주제로 서울 동작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2년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관리 시범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 서울시립대학교 신인철 교수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감 대응 정책의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이후 경기대 이수정 교수,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김의욱 센터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노준석 본부장, 중앙대학교 백남영 교수 등이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을 이어간다.

□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 지역 거점 지정, '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운영

□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시사점과 실행방안을 검토해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거점을 지정하고 이를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인문 상담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에 대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국정과제로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 타운의 실효성 제고방안

이 원 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1. 지역경제 활성화 타운이란?

고속도로 휴게소의 기능강화

- 고속도로 휴게소(service areas)는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주차 및 화장실과 같은 휴식(rest)시설과 더불어 식당, 편의점, 주유소 정비소와 같은 편의(service)시설을 제공하는 곳으로, 최근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설치되고 있는 졸음쉼터(restareas)는 법적으로 휴게소가 아님
-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는 간단한 휴식 및 편의 기능을 넘어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지역 특산물 판매와 같이 대규모 복합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고속버스 노선이 교차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고속버스 환승제도를 통해 중·소도시 주민과 여행자의 목적지까지 이동 편의성을 제고함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하이패스 나들목(IC)설치

- 고속도로 하이패스 IC란 고속도로와 유료도로 통행료를 근거리 전용통신(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 DSRC)을 통해 징수하는 하이패스(Hi-pass)단말기가 장착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IC이며, 휴게소 인근지역 지방도 또는 국도에서 바로 고속도로 진입·출입이 가능함
 - 고속도로 휴게소에 새로 설치하는 하이패스 IC는 한국도로공사와 지자체가 각각 총사업비의 반을 부담
- 현재 203개의 고속도로 휴게소 중 9개소에 하이패스IC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4-1 통도사 하이패스IC에 처음(2011년 12월 27일) 설치된 후, 가장 최근(2019년 12월 30일)에 중부내륙선 22-1번 중앙탑 하이패스 IC가 개통되었음
 - 지방의회 사무기준, 직급기준 설치 신설(97.2.4 시행) 이래 직급체계 고정
 - 행정수요 급증 및 예산 규모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 조직 대폭 확대

2. 공공교통망과 민간 교통 수단간의 연계 가능하게 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지역별 교통여건 및 이용자 통행행태에 기반한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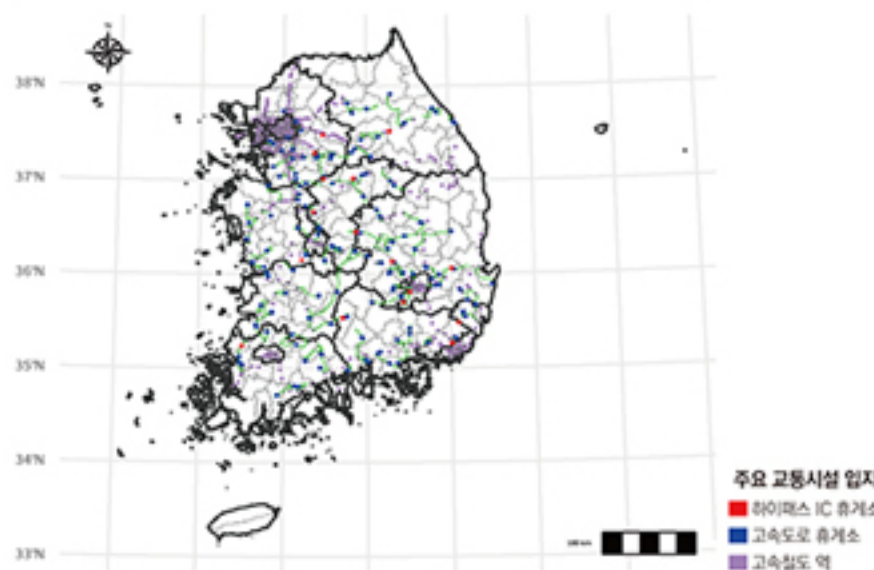
- 제1차 국가도로 종합계획에는 전 국토의 78%, 인구의 96%가 30분 내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제시 되었으나, 주거지역 분포와 이용자의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실제 체감하는 IC 접근 시간은 경기 북부, 경북 일부 지역, 전남지역에서 100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배운경 외, 2020)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가까운 고속철도 역까지 대체차량을 이용하여 환승할 경우, 휴게소별 추가적인 통행거리(최소 3.3km에서 최대 72.8km) 및 시간 (최소 4.8분에서 최대 68.9분)에 큰 차이를 보임

- 최적 경로 탐색*을 통해 연결환승 구간은 평균 24.02Km, 22.7분으로 나타남
 - * 링크기반 최단경로 탐색 알고리즘 활용

- 따라서 고속도로 휴게소가 지역경제 활성화 타운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지역별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고속도로-고속철도, 고속도로-대중교통 간의 환승 및 승하차의 편의성 개선이 필요함

고속도로 휴게소-고속철도역 최적 환승구간



출처 : 저자작성(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및 국가교통DB포털 제공자료 분석)

유연한 수단 간 환승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 고속도로 휴게소가 지역의 교통결절점 역할수행을 위해선 하이패스IC 설치 및 연계환승 시설 구축과 같은 교통시설 인프라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통행계획에 따라 선호하는 경로 및 다양한 수단간 연결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이 뒷받침되어야 함
 -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Mobility-as-a-Service, MaaS)은 포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길찾기 검색과 같이 이용자가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경로탐색을 위한 통행 계획 작성이 가능
 - 경로탐색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단일 혹은 수단 간 조합의 선택, 예약, 결제를 단일 플랫폼에서 가능하게 하여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평가

- 지역별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함
 - 지역별 고속도로 IC 및 휴게소 접근성 측정과 더불어 연계교통체계 및 수단간 환승수요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접) 고속도로 휴게소에 지역경제 활성화 타운 개발의 타당성 조사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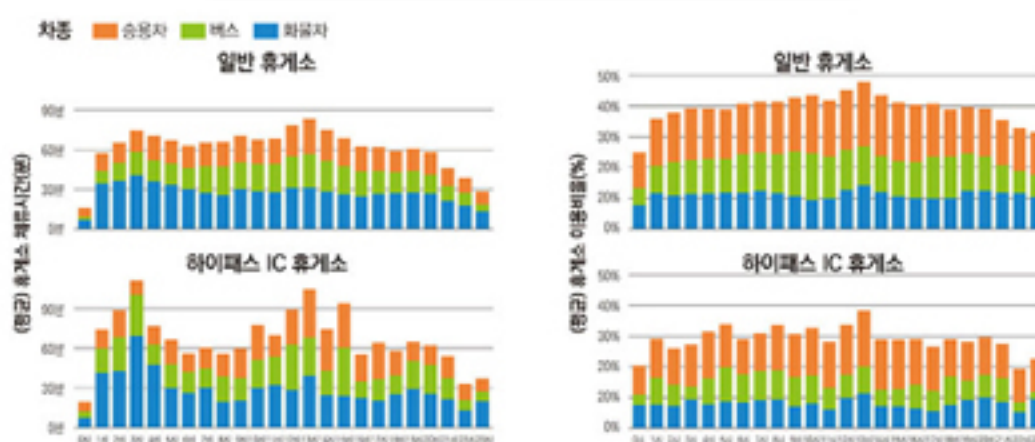
3.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지역경제 활성화 타운 개발의 성공전략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타운 실효성 제고

- 공개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현황(DSRC 데이터, 2018.10.17-20.)자료를 통해 휴게소별 차종에 따른 통행량, 휴게소 이용비율, 체류시간 등을 시간대별로 탐색할 수 있음
- 하이패스 IC가 설치된 휴게소*와 일반휴게소가 위치한 노선에서 검지된 차종별 휴게소 이용비율, 체류시간 등을 시간대별로 탐색할 수 있음
- 하이패스 IC 휴게소의 평균 체류시간이 화물차종을 제외하고 일반휴게소와 비슷하지만, 이용비율(휴게소 이용차량 수/ 대상구간 총 차량수)에선 약 10%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휴게소에서 바로 지역의 국도 혹은 지방도로 진출하여 상대적으로 휴게소 사용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됨

* 2018년 기준 6개소(속리산, 이천, 청주, 충주, 통도사, 현릉휴게소)기준

고속도로 휴게소-고속철도역 최적 환승구간



- 향후 조성된 지역경제 활성화 타운의 정책효과 평가를 위해서는 실시간 교통량 정보와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행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함
 -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분석결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타운의 기능 확장과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에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환류과정을 통해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고, 휴게소에 인접한 산업 및 관광지역을 편리하게 방문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서비스 개발 및 정책지원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_이원도 부연구위원



층간소음 간담회 개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 덜어드리겠습니다!

2022. 08. 18.(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하여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이후,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합니다!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 설치·시공 비용에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



갈등 조정의 첫 단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 500세대 이상 단지 층간소음관리 위원회 설치 의무화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선정, 우수사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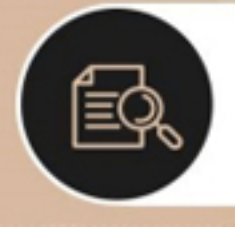
-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 파악
-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선정 등 모범사례 발굴

지어진 주택의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사후 확인 결과 공개

- 국민 알권리 및 기업의 건전 경쟁 유도



공사단계의 품질점검 강화

-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 우수기업 대상 분양보증 수수료 할인(최대 30%)
- 바닥두께 추가 확보 시 공사비 분양가 가산 허용, 높이제한 완화



사후확인제 시범단지 운영을 통한 제도 내실화

-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 및 우수사례 발굴
- 국토안전관리원의 시범단지 운영 참여를 통한 절차·방법 사전 점검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을 발굴·적용합니다!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 추진

-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 추진
-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 심층 분석 연구 용역 추진 검토



우수 기술의 선도적 적용

- 고성능 바닥구조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 적용
- 향후 기술 개발 추이 등을 고려,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4등급 ▶ 2등급 이하) 검토

출처: 정책브리핑 카드뉴스